

건강칼럼

신경차단술

급 성요통이 생기면 사람들은 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허리를 못 쓰게 되는건 아닌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통증의 원인이 심각한 병이 아니면 수일간의 안정을 취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수일간의 안정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 내원시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치료는 비침습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이다. 이러한 비침습적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고려되는 치료법이 신경차단술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절이나 해당 신경에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차단하고 염증을 억제해 통증을 없애거나 경감 시키는 치료법이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으나 경막외 신경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후관절 차



김종훈

무렵병원 신경외과 원장

단술 등이 주로 사용된다. 신경차단술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효과적이다.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만 국소부위에 미량만 사용하므로 신경차단술을 자주 반복적으로 받지만 않으면 부작용이 심

하지 않다. 그러나 약물이 작용하는 동안에만 진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효가 소실되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통증을 조절할 목적으로 몇 차례 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당뇨, 골다공증 등을 일으키는 무심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있다. 신경차단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 가능한 치료법이며 보통 70-80%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증이 있지만 1-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근력저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시행하기 적당한 치료 방법이다.

독자제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다문화 사회의 발전으로 근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이주 여성들 대부분은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한 가족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혼적령기를 놓친 남성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상대 여성을 소개 받아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감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며 이들이 살아온 생활방식과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무관심 등이 존재하여 그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름과 생활 방식을 부부간이나 고부간에 인정하지 않아 각각의 생활방식만을 고수하고 매매혼의 성격이 강한 탓에 이주여성들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대상으로 생각하여 부부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 학대, 폭행 등으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서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양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

목적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며 타국생활을 하는 이주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 편견 속에서 한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배려를 지속하고 각종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정착 지원,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아 주는 것이 우선이며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양재남원경철서종양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범죄피해자 우리 사회가 보듬어줘야

과거 수사 사법당국은 엄벌주의로 가해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상처를 평생 가슴에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수치심과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는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렇듯 범죄피해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권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이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또한 보장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 과거 소홀했던 피해자보호에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바에 비해 현실을 위한 임시수속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감시소로 오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등 범죄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이와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이사실비, 그 밖의 의료비와 생계(행정기관), 법률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해당 재판절차의 참여 진술권,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있으며 그 밖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등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도 도입되었다. 중요사건은 물론 각 개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하며 사건초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이 진행 될 때에는 현장감정에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식전환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남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더욱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제도과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더 이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보듬어주는 모두의 노력이며 진정한 아픔을 나누는 올바른 자세 일 것이다. 박지환전주원경철서평화파출소순경

사설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챙겨야

전북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주요 SOC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도와 국지도에 대해서이다. 사업 건수가 겨우 10개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된다. 우리 전북이 정부로부터 말도 안되는 출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어떤지 묻고 있는 것이다. 전체 119건 중에서 경북은 23건, 경기는 17건, 충남과 경남은 16건, 강원은 15건이니 하는 말이다. 충북과 전남도 11건으로 우리 전북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한 바 있거니와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는 데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겠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전북도는 억척스러움이 부족하다. 이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향토의 발전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가 분발해야겠다. 전북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몫을 챙기는 억척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마땅치 않다고 했거니와 발전 내용의 면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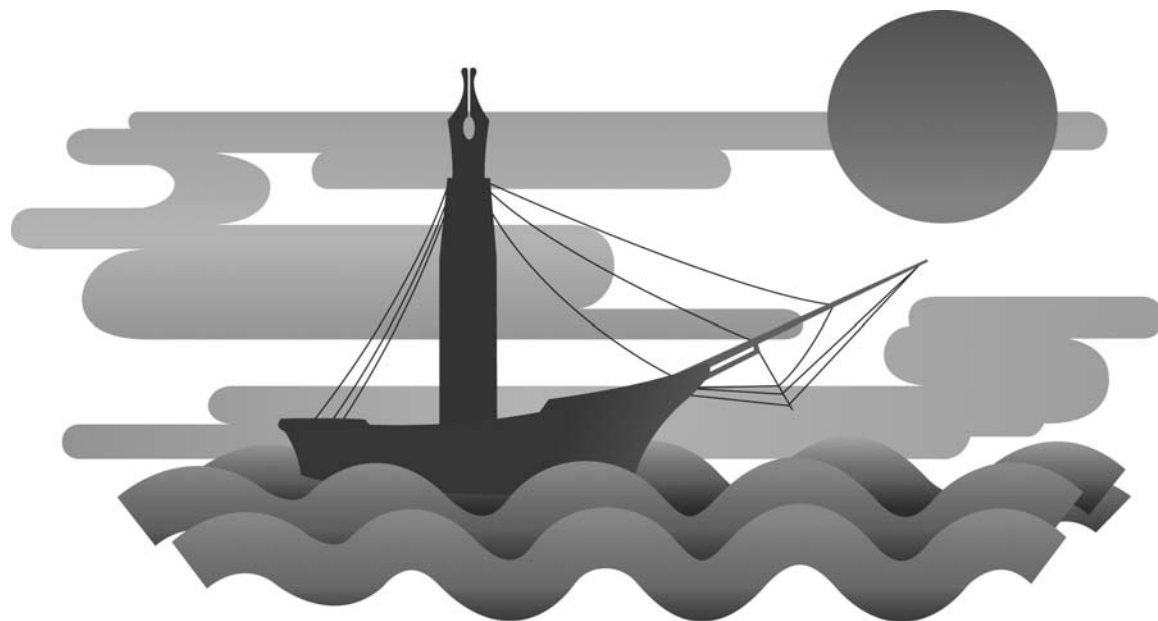
초라하다. 정부 부처로부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조용한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답답한 세월이다. 매번 이런 식이라면 우리 전북이 웰빙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난망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전북 출대가 심각하다. 전북도는 정부의 그같은 불명등한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같은 이의 제기가 없다면 앞으로는 전북을 우습게 볼 게 뻔하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적은 배정을 당연시 할 거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제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정말이지 그같은 출대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앞둔한 탓에 전북도와 도민들은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전북도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향토 발전을 위해서는 제 몫을 챙기는 억척스러움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을 이끌 이쪽의 청사진이 정부 쪽에 먹혀들지 않는 세월이 계속되고 터에 당연히 챙겨야 할 SOC 몫마저 못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정부의 푸대접을 아파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재무를 챙기는데 더욱 열정을 가져야겠다.

청년 고용 열기 아직도 미지근

청년 고용의 열기가 미지근하다.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다. 감각이 둔해서가 아니라 아예 마음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청년 취업 성적표가 초라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하는데 그게 말뿐이다.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사를 쓸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문제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이다. 청년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말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이 9.5%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같은 수치는 미덥지 않다.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이 그 이상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그에 공감하

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도 열정페이라는 게 존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열정 페이가 오히려 청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까닭이다. 열정 페이가 그 이름값을 하려면 후퇴해야 한다. 인색한 보수로는 열정 페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전북도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도 생각해야 한다. 미취업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좀더 유연해야겠다. 전북도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대상이 아니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은 전북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대로 청년 고용 열기를 식혀둔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에게 거듭 당부하거니와 청년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만 되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